

국민성장펀드의 조성 구조와 투자 체계: 정책에서 실제 집행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위-금융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이나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AI 등 미래 첨단산업,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의 물꼬를 돌려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강력한 당부였습니다. 본 간담회에서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의 늪을 탈피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100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금융권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관계부처, 산업계 및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펀드의 구체적인 조성 방향과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결실로 2026년 1월, 우리 경제의 지형을 바꿀 핵심 사업들을 담은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7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계획」이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체계와 주요 투자 사례(7대 메가프로젝트), 그리고 이로 인한 산업계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성장펀드 개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 플랫폼

정부는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집중 지원하여 향후 20년의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15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합니다. 본 펀드는 정부가 출연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국민, 금융기관, 연기금 및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자본 75조 원을 결합하여 강력한 투자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펀드의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10대 첨단 전략산업 및 관련 기술·인프라 기업을 망라하며,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개정을 통해 게임과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분야로도 투자를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벤처 생태계를 보호하고 첨단전략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간 150조 원 이상의 재원을 과감하게 투입합니다.

자금 운용은 핵심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춰 세 가지 방식으로 세분화됩니다. 우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기업과 인프라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 50조 원을 배정하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기간망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융자에 50조 원을 투입하며, 전략 산업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저리 대출에 50조 원을 운용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첨단 산업 육성, 벤처·혁신 활성화, 그리고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 세부 추진 체계: 자원 조성 및 다각적 지원 전략

가. 펀드조성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권·연기금은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도모합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한 국민참여형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나. 지원대상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펀드가 규정하는 주요 지원 분야는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 제2항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에 의거하며, 관련법에 따른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	세부 범위
국가첨단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핵심광물
콘텐츠산업진흥법	K-콘텐츠

나아가 구체적인 법적 지원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대상기업		
첨단전략산업기업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	해당 산업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주체
첨단전략산업 관련기업	핵심 거래상대방	첨단전략산업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
	공급 및 구축기업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
	투자 및 지원기업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 대출, 보증, 사채의 인수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기업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신성장동력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미래 산업의 근간인 R&D 혁신, 그리고 벤처·스케일업(Scale-up)의 활성화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개별 기업 지원 방식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합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차원의 '메가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다. 지원방식

국민성장펀드는 자금의 용도와 산업 특성에 따라 지원 방식을 네 가지 트랙으로 세분화하여 총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에너지 고속도로 및 전략 산업 거점 형성을 위한 ① 인프라 투·융자에 50조 원을 배정하고, 기업들이 금리 부담 없이 시설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고채 수준(3% 이내)의 ② 저리 대출 50조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민간 자금과 결합하여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③ 간접투자에 35조 원을 투입하며, 특히 이 중 5조 원은 국민참여형 펀드로 조성하여 성과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첨단 제조공장 건설 및 기업 M&A를 뒷받침하기 위한 ④ 직접 지분투자에 15조 원을 운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6년은 본 펀드가 본격 가동되는 원년으로, 조속한 정책 효과 가시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금을 배정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위: 조원)

'26년 국민성장펀드 지원방식별 자금배분(안)		
구분	첨단기금	민간
직접투자(3조원)	1.5	1.5
간접투자(7조원)	1.5	5.5
인프라금융(10조원)	2.0	8.0
저리대출(10조원)	10.0	-
합계(30조원)	15.0	15.0

* 재정은 1조원 규모로 민간자금 투자를 지원 (후순위투자 또는 마중물 지원)

3. 향후 추진 계획 및 정책 로드맵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가동과 함께 정책 효과를 가시화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 파급효과가 큰 '7대 메가프로젝트'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펀드의 4대 지원 트랙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첫 번째 실행 모델입니다.

제목	지원방식	개요 및 산업적 의미
K-엔비디아 육성	직접투자	(개요) AI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기업의 증자 참여 검토 (산업적 의미) AI 컴퓨팅 인프라, 피지컬 AI 등 AI산업을 이끌어갈 국내 팹리스·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인프라투융자	(개요) GPU 서버가 집적된 데이터센터를 지역에 구축 (산업적 의미)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산품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기술 및 데이터 주권 확보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	인프라투융자	(개요) 지역 첨단산업단지 내 전력을 공급하여 AI데이터센터, 이차 전지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 (산업적 의미) 국내최초 순수 국내자본의 대규모(300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
첨단AI반도체 파운드리	저리대출	(개요) AI반도체 및 고성능 컴퓨팅 등 AI반도체 시장의 수요에 대응 하는 최첨단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건설 (산업적 의미) 국내 소부장, 설계(IP), 패키징 협력업체 등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반도체 에너지인프라	인프라투융자	(개요) 반도체클러스터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전력 및 열공급을 위한 LNG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 (산업적 의미) 반도체기업 및 생태계 구성 협력사 기업에 열·전력을 공급→반도체 밸류체인의 안정 지원
이차전지 소재공장	저리대출	(개요) 중견기업이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의 핵심소재인 황화리튬 (LiS)의 생산설비를 구축 (산업적 의미) 첨단이차전지 산업의 전주기(소재→제조→전기차 →재활용)에 걸친 인프라가 조성된 지방 특화단지 발전
차세대 전력반도체	저리대출	(개요) 전력반도체 기업이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구축 (산업적 의미) 차세대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시설자금 대출로 국내 밸류체인 강화

정부는 2026년 상반기 내에 분야별 전문 운용사(GP)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7대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한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하여 연간 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차질 없이 수혈할 예정입니다. 특히 1차 프로젝트에 머물지 않고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R&D 성과의 산업화 및 지역 성장 프로젝트 등 국가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 지원과 더불어 생산적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 혜택 및 인력 양성 정책을 연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참여형 펀드의 투명한 운용을 통해 국가 산업 성장의 결실이 일반 국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지지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시사점

이번 정부 발표 내용 관련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범부처 '메가프로젝트' 발굴 체계에 따른 선제적 사업 기획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단순히 자금을 신청받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대형 과제를 직접 기획하고 발굴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정부의 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제안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전남 해상풍력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들은 펀드 지원을 통한 설비 투자 확대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 ②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수혜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로 지원 범위가 10대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거래상대방(Off-taker), 장비 공급 및 설비 구축 기업, 나아가 투자·지원 기업까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첨단 기술 보유 기업이 아니더라도 전략 산업 생태계 내에서 자사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개정된 시행령상의 법적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정책 자금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3% 이내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 트랙'을 활용한 재무 구조 최적화 전략이 요구됩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첨단산업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제공되는 50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은 기업의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기회입니다. 기업들은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대출 심사 기준과 한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고금리 차입금의 대환이나 신규 시설 자금 조달 계획에 국민성장펀드를 우선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수익성 개선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 ④ 민·관 합동 펀드의 '후순위 인수' 구조를 활용한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이 리스크가 높은 후순위 출자나 대출을 부담함으로써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인 만큼, 리스크가 커서 추진이 지체되었던 대형 프로젝트들을 재가동할 적기입니다. 기업들은 에너지 고속도로나 차세대 배터리 라인 등 고난도 프로젝트 추진 시 국민성장펀드의 인프라 투·융자 트랙(50조 원)을 지렛대로 삼아 민간 자금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민·관 협업 모델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한편, 2026년부터 본격화될 국민성장펀드 운용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계획사업의 내용,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금융구조 및 조건, 사업 타당성 및 리스크 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프로젝트가 이러한 정책금융 심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재무적 건전성 입증은 물론, 법률적·금융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심사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율촌은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최신 정책금융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기업들이 최적의 금융 구조를 설계하고 엄격한 정책 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분석 및 리스크 완화 방안 수립에 차별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Yulchon Legal Update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정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문이나 심사 대응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 Areas

에너지

인프라

환경

ESG

Contact

손금주 변호사
02-528-5094
kjson@yulchon.com

이경준 변호사
02-528-5411
kjlee@yulchon.com

김홍 변호사
02-528-5053
hkim@yulchon.com

양재선 외국변호사
02-528-5192
jsyang@yulchon.com

윤용희 변호사
02-528-5284
yhyoon@yulchon.com

김원진 변호사
02-528-5698
weonjinkim@yulchon.com

강현규 변호사
02-528-5341
hgkang@yulchon.com

김진섭 변호사
02-528-5270
jskim@yulchon.com

문승욱 고문
02-528-6699
swmoon@yulchon.com

안완기 고문
02-528-5556
wgahn@yulchon.com

김형윤 고문
02-528-6717
hyoonkim@yulchon.com